

총 평

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.

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문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,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.

이번에도 나타났듯이 기본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늘 변함이 없는 합격의 진리입니다.

기본을 반복하는 학습법만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고, 이번 시험으로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고,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.

신용한 드림.

출제유형분석

|       |   |           |   |
|-------|---|-----------|---|
| 총론    | 4 | 재무행정론     | 3 |
| 정책론   | 4 | 정보화사회와 행정 | 1 |
| 조직론   | 3 | 행정환류      | - |
| 인사행정론 | 4 | 지방행정론     | 1 |

0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.
-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.
-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.
-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.

**해설** ② [×]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요시한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총론 p.158

▶ ②

02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추출정책 - 부실기업 구조조정
- ㄴ. 상징정책 - 노령연금제도
- ㄷ. 규제정책 - 최저임금제도
- ㄹ. 구성정책 - 정부조직개편
- ㅁ. 분배정책 - 신공항 건설
- ㅂ. 재분배정책 -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

- ① ㄱ, ㄴ, ㅁ
- ② ㄱ, ㄷ, ㅂ
- ③ ㄴ, ㄷ, ㅂ
- ④ ㄷ, ㄹ, ㅁ

**해설** ㄱ [×] : 부실기업 구조조정 - 규제정책

ㄴ [×] : 노령연금제도 - 재분배정책

ㄷ [○] : 최저임금제도 - 규제정책

- ㄹ [○] : 정부조직개편 - 구성정책
- ㅁ [○] : 분배(배분)정책 - 신공항 건설
- ㅂ [×] : 분배(배분)정책 -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.184, 185

▶ ④

### 0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-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.
-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.
-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.

**해설** ① [×]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 
 ② [○] 승진의 기준으로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실적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. 따라서 경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.  
 ④ [○]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.477, 530, 559

▶ ①

### 0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.
- ②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.
-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.
- ④ 우리나라는 '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'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.

**해설** ① [○] 계층제는 내부-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.  
 ② [×] 공금횡령은 내부부패이면서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. 거래형 부패는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이다.  
 ③ [○]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 
 ④ [○]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, 정당의 책무, 기업의 의무, 국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.543, 545 /행정환류 p.730

▶ ②

## 05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.
-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.
- ③ 모두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다.
-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.

**해설** ① [×]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.

② [×] 국가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,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제도에  
서 제외된다.

③ [○]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무원"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  
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.

④ [×]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.450. 520 / 지방자치론 p.870

▶ ③

## 0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,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 
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·결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,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 
둘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 
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한다.

**해설** ③ [×]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 
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(필요시 ×)

국가공무원법 제9조(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  
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③ 국회사무처, 법원행정처,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 
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,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  
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 
구성하되,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·결정  
할 수 있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.557

▶ ③

## 07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책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.
- ② 사업 주무 부처(기관)에서 수행하며,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.
-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, 편익,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.
-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
**해설** ② [×]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담당 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경제적·정책적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.636, 637

▶ ②

## 0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예비비 편성
- ② 추가경정예산
- ③ 특별회계 운용
-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

**해설** ①, ② [○] 예비비의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한정성의 원칙 중 초과지출금지의 원칙의 예외이다.

③ [×]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,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.

④ [○]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.574

▶ ③

## 0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.
- ②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.
-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.
-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.

**해설** ① [×]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며,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. 2003년부터 금융성 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(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)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.589~591

▶ ①

## 1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.
-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.
-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.
- ④ 롤스(J. Rawls)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‘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’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**해설** ④ [X]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(동등한)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총론 p.82~86

▶ ④

**11** 전자정부(e-government) 구현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.
- ② 조직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.
-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능도가 낮아진다.
-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.

**해설** ① [X] 전자정부의 구축은 직무 간, 기능 간 경계가 흐려지고 일의 흐름과 협동적 문제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음매 없는 조직이 구현된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.706

► ①

**12**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.
- ㄴ.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.
- ㄷ.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.
- ㄹ. 엘리스모형은 정책문제, 해결책, 선택기회,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.

- ①  $\neg$ ,  $\perp$   
②  $\neg$ ,  $\top$   
③  $\perp$ ,  $\equiv$   
④  $\top$ ,  $\equiv$

**해설** 나. [×] 만족모형은 실제 의사결정자들이 모든 대안의 탐색이 아닌,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면 의사결정을 종료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.

ㄹ. [X]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, 해결책, 선택기회,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.248, 253

▶ ②

### 1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,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.
-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.
- ③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하며, 수평적·수직적·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.
-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, 내부규칙,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.

- 해설** ① [×]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낮고, 분권화되어 있으며, 수직적 분화가 낮은 수평적 조직의 특징을 보여준다.
- ② [×] 집권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.
- ④ [×] 공식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, 내부규칙,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.322~324

▶ ③

### 14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.
-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.
-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.
-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.

- 해설** ① [×] 네트워크 조직은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.320

▶ ①

### 15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(path dependency)을 강조한다.
-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, 합리적 선택이론,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.
-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.
-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,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.

- 해설** ④ [×]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, 국가간 차

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총론 p.138

▶ ④

## 1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.
- ㄴ.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.
- ㄷ.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도 상하수도, 교통관리, 건강보험 등이 있다.
- ㄹ.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.
- ㅁ.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.

① ㄱ, ㄷ

② ㄱ, ㅁ

③ ㄴ, ㄹ

④ ㄷ, ㅁ

**해설** ㄷ. [×]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, 교통관리 등 일상생활 영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. 다만, 건강보험은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되는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다.

ㅁ. [×] 전기와 고속도로는 요금재(공유재)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총론 p.34

▶ ④

##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.
-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,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.
-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.
-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.

**해설** ① [×] 정책분석을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.

② [×] 참여관찰법, 심층면접법 등은 정책평가의 질적 기법으로 분류된다.

④ [×] 정책평가 연구에는 현실적 제약으로 진실험적 방법보다는 준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.280

▶ ③

**18** 바흐라흐와 바라츠(P. Bachrach & M. S. Baratz)의 무의사결정(non-decision making)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.
- ② 정치체제의 규범, 규칙, 절차 자체를 수정·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.
-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.
-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.

**해설** ① [×] 무의사결정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.195

▶ ①

**19**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.
-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.
-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.
-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.

**해설** ① [○]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며,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.

② [×]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처장을 보조하고,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이다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.366, 368, 369 / 인사행정론 p.458

▶ ②

**20**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.
-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(지방세수입, 지방세 외 수입)의 비율을 의미한다.
-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.
-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.

**해설** ② [×]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로 '기준재정수입액/기준재정수요액'을 의미한다.

③ [×]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.

④ [×]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한다.

**참고** 2015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론 p.850

▶ ①